

---

#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의 변천과 새로운 모색

---

2005. 10

국민경제자문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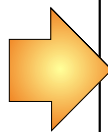
# 목 차

I. 한국경제의 현 상황 .....	1
1. 저투자-저성장의 함정 .....	2
2. 분배와 고용의 양극화 .....	5
3. 세계화에 따른 기회와 위협 .....	7
4. 참여욕구의 확대와 사회적 합의의 부재 .....	8
II.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의 변천과정 .....	9
1. 개    요 .....	9
2. 한국형 발전모델의 형성 및 성숙기('61-'80) .....	11
3. 제한적 경제자유화에 의한 한국형 발전모델의 변형기('81-'92) .....	12
4. 세계화 추진과 한국형 발전모델의 위기('93-'97) .....	13
5. 영미식 시장경제 모델의 도입과 전환기('98-현재) .....	14
III. 새로운 발전모델의 형성을 위한 과제 .....	15
1. 성장잠재력의 확충 .....	15
2. 재벌의 성과와 한계 .....	17
3.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성과와 한계 .....	20
4. 금융산업의 성과와 한계 .....	22
5. 사회안전망의 강화 .....	24
6. 노사관계의 변화 .....	26
7. 국가의 기능 변화 .....	28
VI. 한국경제에 대한 세가지 관점과 모색 .....	30
1. 시장경제론 .....	30
2. 시장개혁론 .....	33
3. 사회적 시장경제론 .....	36
<첨부> .....	40

# I. 한국경제의 현 상황

- 지난 40년간 고도성장을 지속해 온 한국경제는 최근 저투자-저성장, 분배·고용의 양극화 등 과거와는 구별되는 일련의 경제현상을 겪고 있음
- 새로운 경제현상은 지난 40년간의 양적 성장을 이끌어 온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이 와해되고, 선진경제·선진한국 달성을 위한 새로운 성장체제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진통임
- 이 글에서는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의 변천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모색코자 함

◆ 경제개발 시대의 경제상황
○ 경제개발 과정에서 높은 설비투자 증가 지속
○ 수출주도에 의한 경제성장 달성
○ 노동력 공급의 확대는 경제성장의 주요 원천으로 작용
○ 경제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
○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규직 위주의 고용이 증가
○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외환 및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 실시
○ 억압적 형태의 국민동원에 기초한 경제성장 달성



◆ 현재의 과도기적 경제상황
○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
○ 수출은 증가하나 성장은 둔화되는 추세
○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노동력 공급이 감소할 전망
○ 소득수준은 향상되고 있으나 소득격차는 심화되는 추세
○ 고용률은 회복되고 있으나 고용의 안정성은 후퇴
○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의 증가에 따른 기회와 위험 요인이 존재
○ 국민의 참여욕구는 증가하나 사회적 합의는 부재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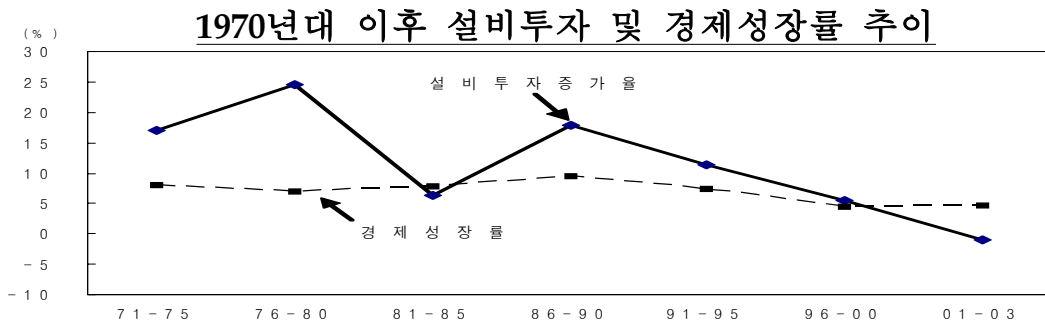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의 변천과 새로운 성장시스템의 모색

[☞ 목차로 돌아가기](#)

# 1. 저투자-저성장의 함정

##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

- 최근의 저금리 기조 유지 등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가 부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80년대 후반 연평균 15% 수준이던 설비투자 증가율은 '90년대 들어 둔화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 이후 둔화추세가 심화



- 전반적 설비투자의 부진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설비투자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
  - '03년 이후 대기업의 설비투자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는 증가세가 미미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둔화는 주로 저임금 노동력 등을 위해 해외투자가 증가한 데 기인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 비교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03	'04	'05(전망)
대기업	27.4	45.9	14.5
중소기업	-3.4	3.8	2.3

- '04년 현재 설비투자의 GDP대비 비중은 9.2%로 미국, 일본 등과 비슷한 수준이나 우리의 성장률이 이들 국가보다 높아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설비투자의 확대가 필요함
  - 그러나 최근의 설비투자 부진이 우리경제의 구조적, 전환기적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어 과거와 같은 높은 증가율의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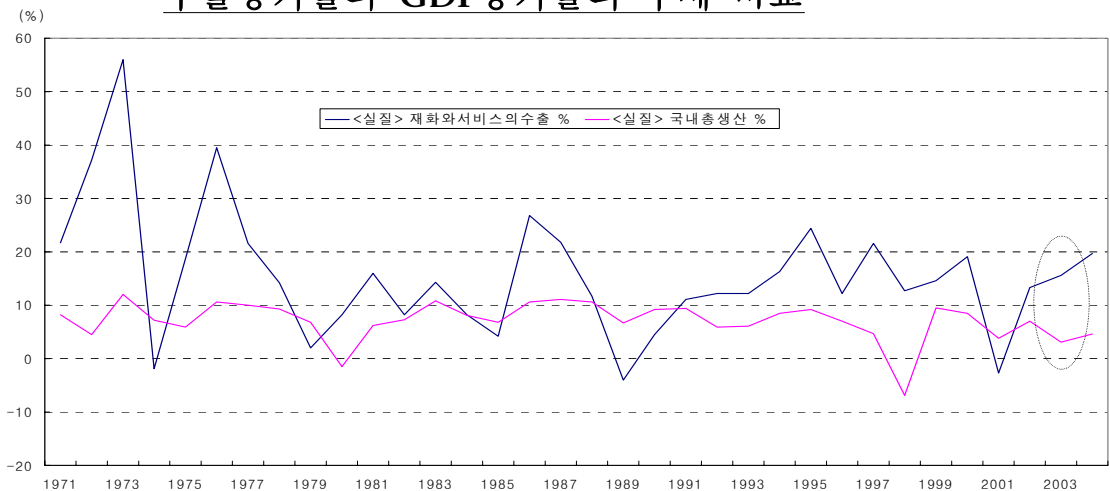
## 수출은 증가하나 성장은 둔화 추세

- 지난 30년간 수출증가율과 GDP증가율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동일한 변동패턴을 보여 왔음
  - 수출증가율의 상승·하락은 GDP증가율의 상승·하락과 대체로 일치하여 수출의 성장유발효과가 매우 높았음
  
- '03년 이후 수출 증가세는 확대되고 있으나 GDP 증가세는 미약하여 수출증가가 GDP증가로 연결되지 못하는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 수출과 성장의 괴리는 과거에도 경기침체 또는 산업구조의 전환기에 발생한 사례가 있음 ('70년대 초 및 '80년대 초 등)
  - \* 수출과 성장의 괴리는 근본적으로 산업연관의 약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기인하므로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수출의 높은 성장유발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이와 같은 괴리현상은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는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 기인

(전년 동기대비, %)

	2001	2002	2003	2004	2005.상
민간소비 증가율	4.9	7.9	-1.4	-0.5	2.1
설비투자 증가율	-0.9	7.5	-1.5	3.8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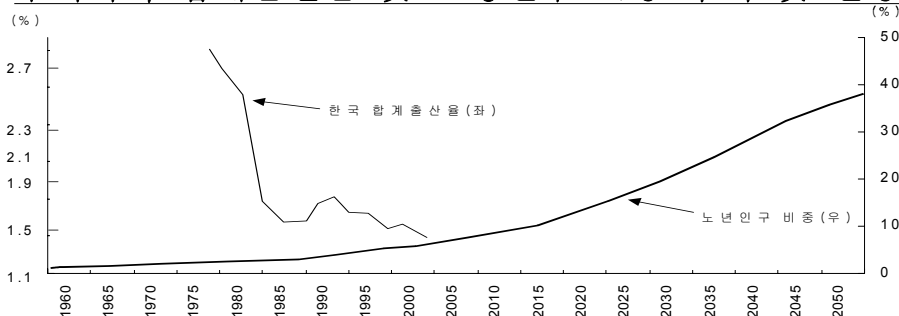
**수출증가율과 GDP증가율의 추세 비교**



##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도래로 노동력 공급이 감소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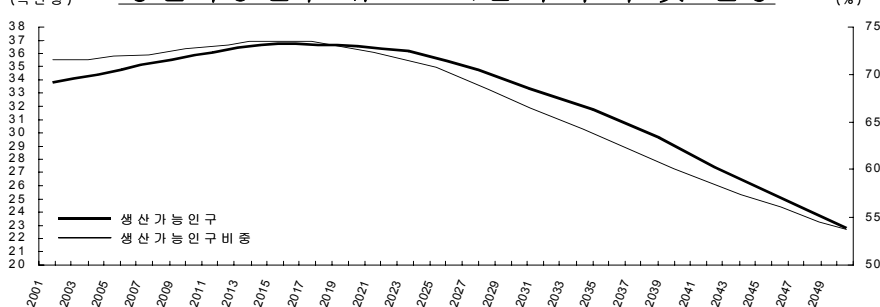
- 노동투입의 증가는 우리나라가 달성한 고도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천의 하나였으나 출산율의 저하 및 고령화의 진행으로 앞으로 노동력 공급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우려됨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0~90년대에 들어 급격히 하락하여, '04년 현재 1.1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00년에 노령인구(65세 이상)의 비중이 7%를 넘어서게 됨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6년경에는 20% 이상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노령인구 비중 추이 및 전망



-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전체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2020년을 전후로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 예상

생산가능인구 규모·비율의 추이 및 전망



- 노동력 공급의 둔화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인구구조 변화만 고려한 성장률 전망(통계청의 모의실험 결과)

연 도	2006~2010	2011~2020	2021~2030	2031~2040	2041~2050
평균성장률	4.12	3.43	3.33	2.64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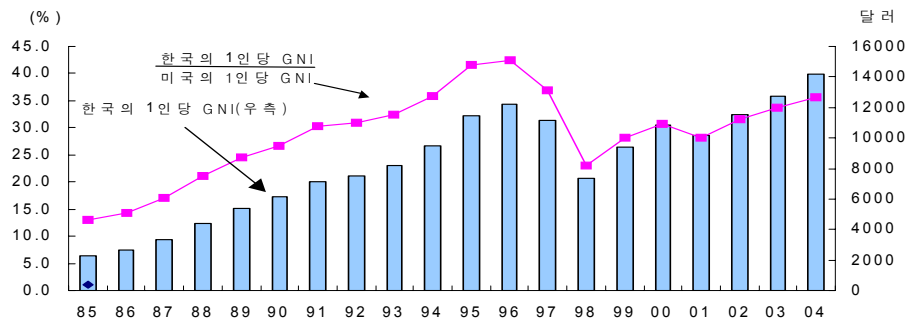
[☞ 목차로 돌아가기](#)

## 2. 분배와 고용의 양극화

### 소득수준은 향상되고 있으나 소득격차는 심화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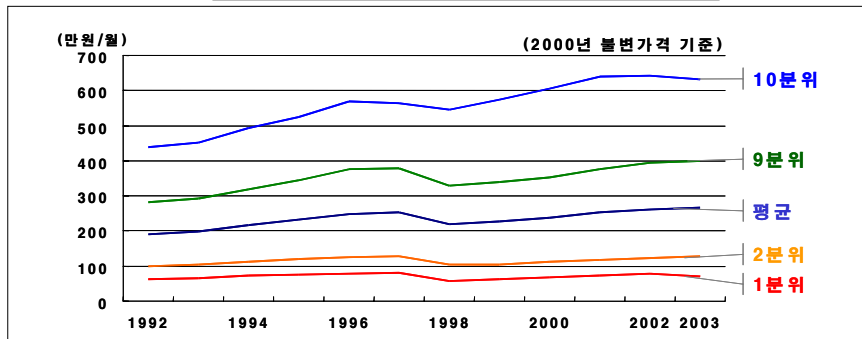
- '04년말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4,162달러로 20년 전인 '85년(2,309달러)보다 약 6.1배 증가
  - 외환위기 기간('98~'99) 중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03년 이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음
  - 1인당 국민소득을 미국과 비교해 보면, '85년의 13.0% 수준에서 '04년에는 35.5%로 상승하였음

#### 우리나라 1인당 GNI규모 및 대미 비중 추이



- 국민소득의 전반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이후 도시근로자의 소득 불평등도는 지속적으로 악화 추세
  - 상위 10% 및 20%의 소득 증가율이 하위 10% 및 20%의 소득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여 성장의 열매를 상위계층이 독점

#### 소득 계층별 실질 월소득 추이



주: 도시근로자 가구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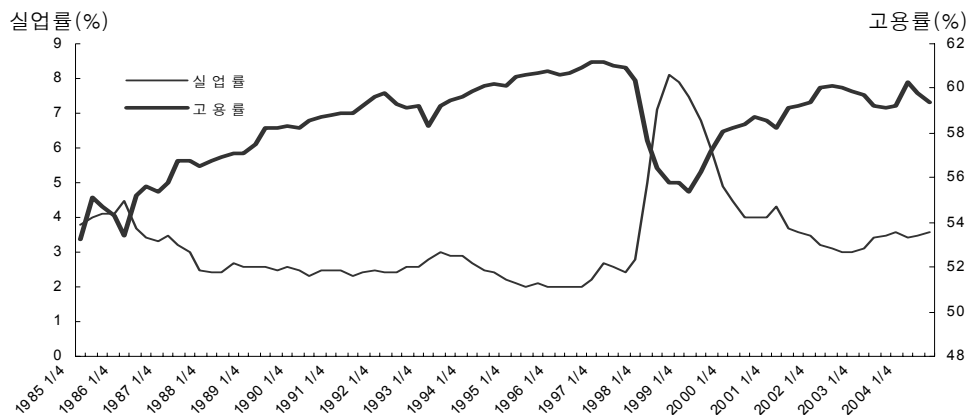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 지니계수는 '90~'97년 중 평균 0.286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98~'03년 중에는 평균 0.315로 높아짐

## 고용률은 회복되고 있으나 고용의 안정성은 후퇴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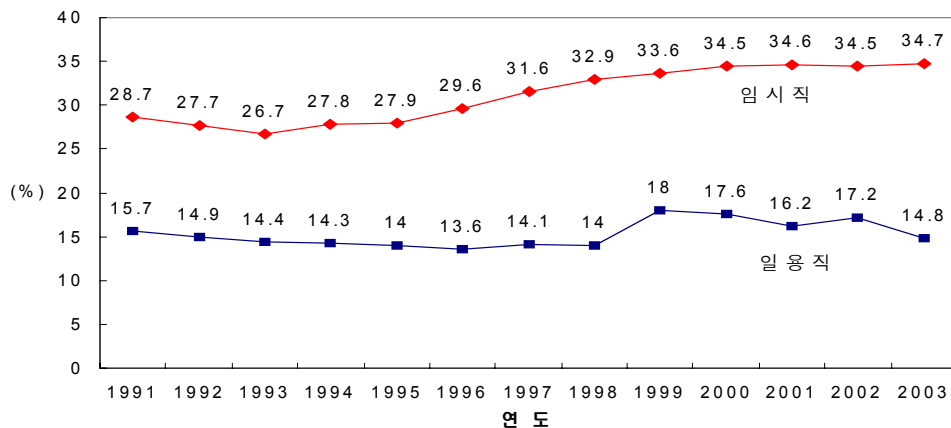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고용률(취업자수/15세이상인구)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2~4% 수준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외환위기 기간 중 고용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증가하였으나 '03년 이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

**우리나라의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 이와 같은 고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시직의 증가에 따라 고용의 안정성은 크게 후퇴하고 있는 상황
- '93년 26.7%였던 임시직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03년 현재 34.7%를 차지

**임시직 및 일용직의 고용 비중 추이**



[☞ 목차로 돌아가기](#)



### 3. 세계화에 따른 기회와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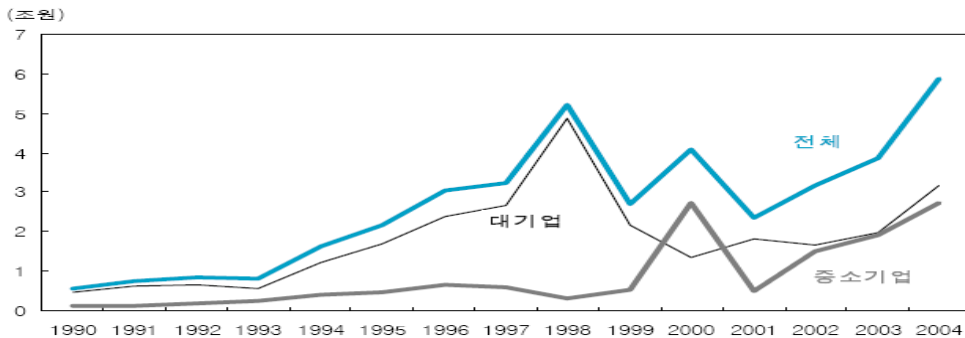
-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자유화, 개방화 진행으로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와 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외국인의 주식투자 및 직접투자 추이

	2001	2002	2003	2004	2005.10월
주식투자(조원) (사기총액대비중,%)	91 (35.7)	93 (36.0)	142 (40.1)	173 (42.0)	223 (40.5)
직접투자(억 달러)	-	91	65	128	-

-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90년대 초반 10억 달러 수준에서 2000년대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여 '04년에는 58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 특히 저임금 노동력을 위한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이 크게 증가함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추이



- 외국인 투자 및 해외투자의 증가는 우리경제의 세계화 진행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향후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의 주식투자는 시장기능의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단기 업적주의에 의한 투자위축의 부작용을 초래함
  -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는 국내 산업의 공동화와 산업연관의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의 자유화·개방화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의 제고를 가져올 것이나, 무한경쟁의 위협과 상시적 경쟁낙오 위험에 노출되어 불확실성 증대
- 법률, 회계, 교육, 의료 등 미개방 서비스 분야의 조속한 개방과 경쟁력 제고 또한 과제
  - [☞ 목차로 돌아가기](#)

#### 4. 참여욕구의 확대와 사회적 합의의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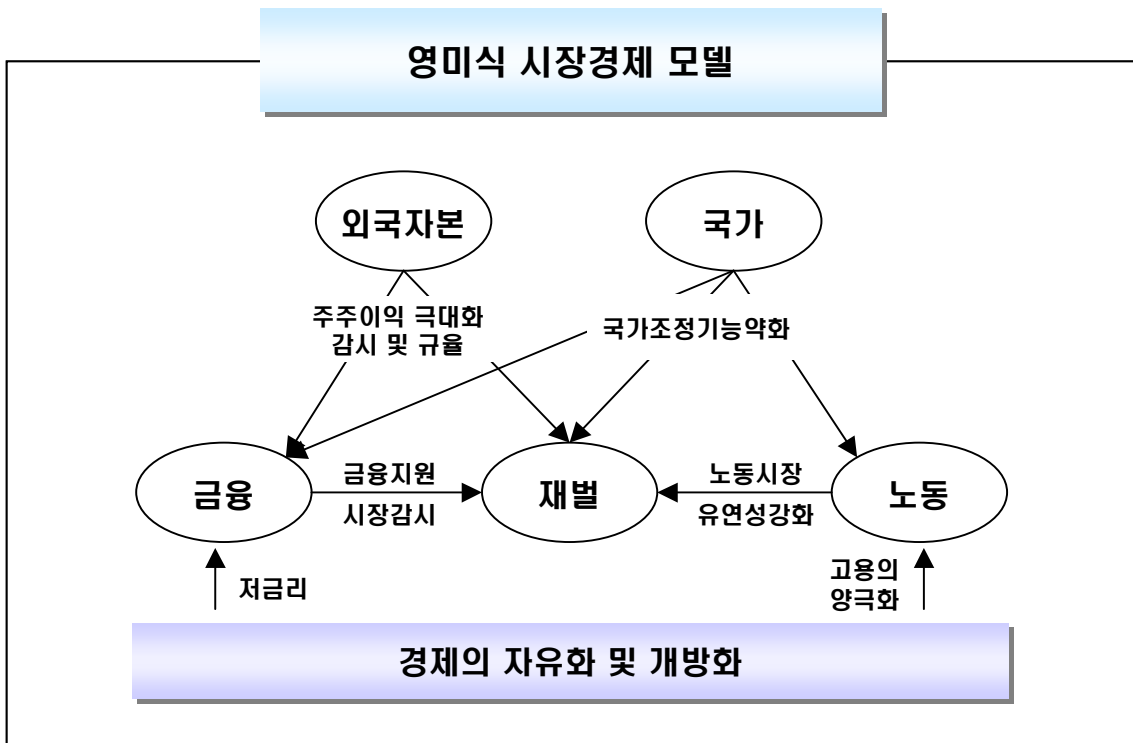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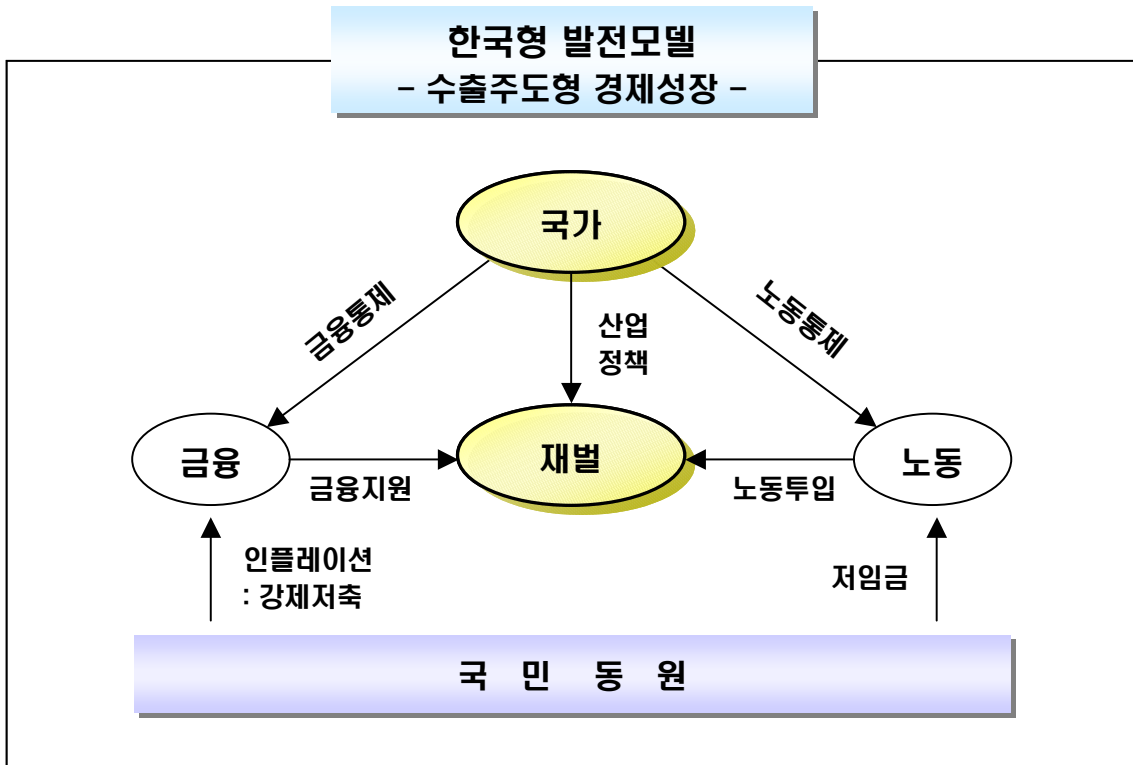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87년을 기점으로 국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대의 민주주의와 정당정치가 정착되는 등 정치적 민주화가 사실상 완료된 상태임
  - 이와 함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각종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어 정치적 자유는 선진국 수준에 이름
  
- 그러나 정치참여 또는 정치적 민주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경제참여 또는 경제적 민주화의 진행은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는 실정임
  - 개발경제 시대에 형성된 경제력 집중의 완화와 소비자 및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경제참여 또는 경제적 민주화는 비교적 최근해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에 따라 과거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면서 분배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은 경제참여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합의 도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과거 개발연대에는 '잘살아보자'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국민경제 전체가 공통의 목표를 향해 노력할 수 있었으나,
  - 현재는 국민경제의 공통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를 모을 수 없는 상황임

[☞ 목차로 돌아가기](#)

## II.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의 변천과정

### 1. 개요

- 1960년대에 형성되어 1970년대에 확립된 한국형 발전모델은 국가통제에 의한 금융 및 인적 자원의 동원과 이에 기초한 산업자본의 축적시스템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음
  - 한국형 발전모델에서 국가(정부)는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한 최고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 재벌대기업은 정부의 규제와 보호 아래에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핵심 주역으로 등장하였음
  - 금융과 노동은 국가의 통제를 받으며 강제저축(인플레이션)과 저임금을 통하여 성장원천으로서의 자금과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
- 한국형 발전모델은 1980년대에는 정치·사회·경제의 자유화에 영향을 받아 일정 정도 변형되면서도 그 근간을 유지하였으며,
  - 1990년대에는 자유화·세계화의 영향을 받으며 크게 약화되고, IMF 위기를 계기로 사실상 해체되었음
- IMF 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입된 영미식 시장경제 모델은 기존의 한국형 발전모델과 많은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 외국자본이 글로벌 기준과 주주이익 극대화를 기치로 재벌기업, 금융 및 노동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였으며,
  - 경제성장을 위한 통합체제로서의 국가, 재벌, 금융 및 노동의 상호관계는 매우 약화되었음



[☞ 목차로 돌아가기](#)

## 2. 한국형 발전모델의 형성 및 성숙기('61~'80)

- 정부는 1964년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서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을 선택함
  - '60년대 후반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를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으로 조립·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산업구조가 정착
- 수출주도 공업화와 이를 위한 내자동원 체제의 한계로 인해 1960년대 말 경제위기가 발생함
  -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해 국가개입에 의한 부실기업정리와 함께 금리인하 및 8·3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산업자본의 축적과 재벌대기업의 형성에 큰 계기로 작용함

\* 1972년 실시된 조치로 기업부채의 3년간 지불유예를 내용으로 함

- 1970년대 초반 유신출범 이후 정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안보적 동기에 의해 중화학공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함
  - 중화학공업화 추진에 따른 리스크를 보상하기 위해 기업들에 가능한 모든 자금지원수단을 동원하였으며, 이는 재벌대기업의 확대 성장에 크게 기여함
  -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은행을 이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은행-재벌의 결합에 의한 소위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형성됨

- 그러나 중화학공업 부문의 과잉중복투자와 이에 따른 재벌기업의 수익성 저하, 금융기관의 부실화, 외채누적과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진행은 1979년의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됨 [☞ 목차로 돌아가기](#)

### 3. 제한적 경제자유화에 의한 한국형 발전모델의 변형기('81~'92)

- '80년대 초 출범한 제5공화국은 한국형 발전모델의 근간을 유지하였으나 이전과는 구별되는 일정한 차별성을 가짐
  - 정부 내에 워싱턴 컨센서스, 즉 신자유주의적 이념과 이를 반영하는 일련의 경제정책으로 무장한 기술관료들이 증가하였으며,
  - 이에 따라 개발독재적 성격의 국가기능은 약화되고 경제전반에 걸쳐 자유시장, 민간주도 경제로의 제한적 이행이 이루어짐
  - 또한 이와 함께 '70년대 말의 외채위기와 인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안정화정책을 실행하였으며, 이들 정책의 성공은 '80년대 후반 3저 호황의 기반이 됨
  
- '80년대 중반 정부는 민간주도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금융·산업·재벌 관련 3개 법률\*을 제·개정하였으며,
  - \* 은행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한 은행법 개정('83년), 산업지원을 위한 공업발전법('86년), 재벌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86년) 등
  - 이에 따라 정부는 사전적이고 직접적인 규제 방식에서 사후적이고 간접적인 규제 방식으로 전환함
  - 그러나 정부는 은행의 금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등 금융통제를 지속하였으며, 유니온샵 폐지 등 노동통제도 지속함
  
- '80년대 들어 정책금융 등 정부의 금융지원이 줄어들었으나, 재벌들은 내부자본시장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를 통해 그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였음
  
- '86-'88년의 3저(저금리·저유가·저달러) 호황으로 개발경제 시대의 경제성장 비전이 달성되면서 민주화와 분배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분출되는 경제적 토대가 마련됨
  - 노동 3법의 전면개정, 최저임금제 시행, 국민연금제도 시행 등 분배욕구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짐

[☞ 목차로 돌아가기](#)

#### 4. 세계화 추진과 한국형 발전모델의 위기('93~'97)

- 문민정부의 등장과 함께 민간 자율성 제고와 개방화 확대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특히 OECD 가입('96년)을 앞두고 이러한 움직임은 급속하게 진행됨
  - 농산물을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 대한 수입자유화를 시행하였으며, 외국인의 주식투자 및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 등 자본과 외환자유화를 추진하였음
  - 또한 시중은행 민영화, 은행경영자율화,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완화 등 금융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음
  
- 이와 같은 급속한 자유화·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과거의 권위주의적 국가통제에 기초한 한국형 발전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됨
  - 은행경영자율화로 은행여신결정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 여지가 크게 축소되고, 제2금융권을 통한 재벌의 자금조달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국가-금융 간의 고리가 와해됨
  - 경제 자유화의 진행과 재벌그룹의 영향력 확대로 인하여 재벌에 대한 국가의 통제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재벌에 대한 지원과 규율이라는 개발경제 시대의 국가-재벌 고리가 사실상 와해됨
  - 또한 고도성장의 실현에 따라 '先성장 後분배' 산업화 논리로는 국민동원이 불가능하게 되고 국가개입에 의한 노동통제가 더 이상 곤란하게 됨
  
- 한국형 발전모델의 와해와 이에 따른 정부의 거시경제 조절능력 약화, 국가기능을 대체할 시장기능의 미성숙, 그리고 자유화·개방화에 편승한 경제주체의 과도한 투자행태가 결합되어 '97년 IMF 외환위기를 초래함

[☞ 목차로 돌아가기](#)

## 5. 영미식 시장경제 모델의 도입과 전환기('98~현재)

- IMF 위기를 계기로 한국경제는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경제전반에 걸쳐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 주주가치 극대화와 최소한의 정부개입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개혁, 즉 영미식 시장경제 모델을 급속하게 도입함
  
- 구조조정 및 경제개혁의 결과 기업·금융 부문의 부실이 정리되고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으며,
  -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자본시장의 투명성 강화 등 우리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각종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이루어짐
  
- 그러나 위기극복 과정에서 우리경제에 새로운 제도와 관행이 지나치게 급속하게 도입됨으로써 소위 “성장동력의 약화”와 “양극화 현상”으로 요약되는 과도기적 부작용(제1장에서 제시된 내용)이 발생함
  - 성장동력의 약화는 우리경제의 앞날에 대한 경제주체의 비관적 전망과 자신감 상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 양극화 현상은 우리경제의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경제주체 간의 갈등과 합의부재를 초래하고 있음
  
- 우리경제가 현재의 침체국면을 탈피하여 선진경제, 선진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 시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
  - 이는 한국형 발전모델의 강점과 영미식 시장경제모델의 강점을 결합한 사회통합적인 새로운 성장체제의 모색에 의해 가능할 것임

[☞ 목차로 돌아가기](#)



### III. 새로운 발전모델의 형성을 위한 과제

#### 1. 성장잠재력의 확충

##### ( 성장잠재력의 의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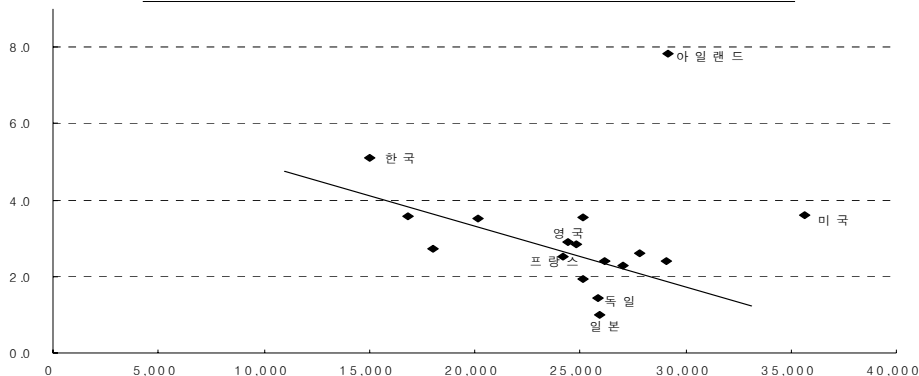
- 성장잠재력이란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노동, 자본, 기술과 같은 생산요소를 투입해 산출물을 최대한 생산해 낼 수 있는 잠재적인 생산능력을 의미
  - 전통적으로 성장잠재력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량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 최근에는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기술수준과 제도적 환경을 중요시하고 있음

##### ( 성장잠재력의 국제비교 )

- 주요국의 1인당 GDP와 잠재성장률 사이의 관계를 보면 대체로 역의 관계가 존재하며, 국민소득 2만 달러 안팎의 경우 잠재성장률이 3~3.5% 수준임
  -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생산성 향상을 달성한 미국의 경우 잠재성장률이 다른 나라보다 높으며,
  - 아일랜드의 경우 유럽 비즈니스 중심국가 전략\*의 성공으로 선진국이면서도 '95년 이후 연 8% 이상의 성장을 지속함

\* '87년 사회협약(Social Partnership)에 따른 획기적인 노사관계안정과 임금안정, 세금감면,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바탕으로 세계 우수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IT· 제약 등 첨단산업 중심지로 성장

OECD 주요국의 1인당 GDP와 잠재성장률



(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전망 )

- 우리나라는 개발경제 시대에 노동 및 자본 투입량의 절대적 증가에 기초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고도성장을 달성해 옴
  - 그러나 앞으로 노동력 공급 둔화와 투자 위축으로 노동 및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하락함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91~'97년 중 6.8%에서 '01~'04년 중에는 4.8%로 하락하였으며,
    - 향후 10년 동안('05~'14)에는 평균 4.6%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및 요인별 기여도 추이 (%)

	1991~1997	2001~2004	2005~2014(예상)
잠재성장률	6.8	4.8	4.6
노 동	1.2	0.9	0.8
자 본	3.9	2.3	2.1
생산성	1.8	1.6	1.7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과제 )

- 선진국의 경험을 고려할 때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경제발전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가피한 과정으로 볼 수도 있음
  - 특히 과거와 같은 노동 및 자본의 투입량에 의존하는 양적 성장전략을 고집할 경우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 따라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노동 및 자본투입량을 적절히 유지하도록 노력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과제 ◆

-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혁신
- 인적자본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육개혁
- 기업(특히 대기업)의 투자능력 회복
- 출산율저하 및 고령화에 대한 대응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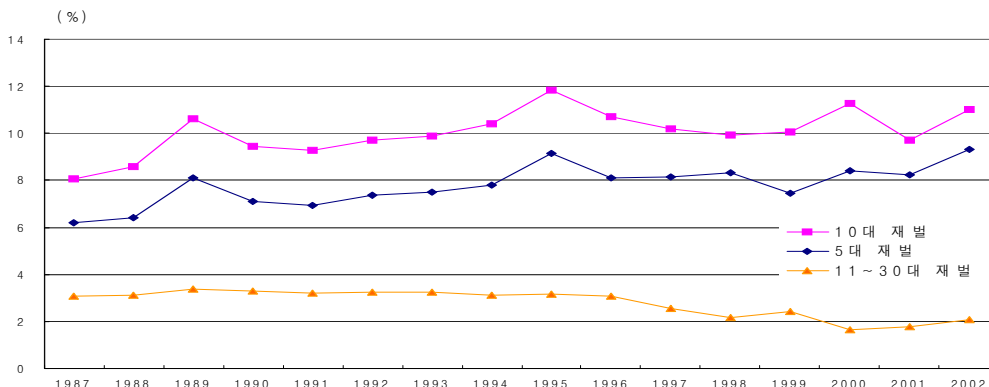
[☞ 목차로 돌아가기](#)

## 2. 재벌의 성과와 한계

### ( 재벌의 형성 과정 )

- 재벌, 즉 기업집단은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시기별로 상이한 자본축적의 계기를 마련하며 형성되었음
  - 1950년대에는 귀속재산불하와 원조 및 무역이 자본축적의 주된 계기였으며, 1960년대에는 외자도입을 통한 기간산업 육성과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의 수출촉진정책을 통해 재벌이 성장
  -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화와 해외건설을 통해 재벌이 성장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과잉투자 조정을 경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금융업과 해외로 진출하면서 확고한 재벌체제가 구축됨
  
- 재벌에 대한 공식적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87년 이후 국민경제 내 재벌(특히 상위 재벌)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재벌이 창출해 낸 부가가치의 대 GDP 비중을 보면, 상위 5대 및 10대 재벌의 경우 등락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반면, 하위 11~30대 재벌의 비중은 완만하기는 하지만 거의 일관되게 하락하는 추세임

**GDP에 대한 30대 재벌 내 집단별 부가가치 비중의 추이**



## ( 성장동력으로서의 재벌의 강점 )

### □ 창업자 총수의 탁월한 경영능력

- 재벌체제는 창업자 총수의 탁월한 경영능력 아래 형성되었으며, 이들 창업자 총수에 의한 과감한 투자가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한 점은 인정할 수 있음
-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5대 업종(정보통신·전자·자동차·철강·조선)은 대부분 창업자 총수의 혁신적 기업가 능력에 의해 창업이 이루어짐

### □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이용한 공격적 투자수행 능력

- 우리나라는 공업화 초기에 자본 및 노동시장이 미발달하여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계열사 사이의 내부 자본 및 노동시장을 통해 시장을 대체·보완할 필요가 있었음
- 특히 계열사 간 상품의 매출·매입, 상호출자 및 지급보증 등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리스크가 높은 신규 장기투자를 공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성장동력으로서 재벌체제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으로 인정되고 있음

### □ 기업규모의 대형화는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척도

- 각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국가발전은 곧 기업의 발전, 특히 기업의 집적과 집중을 통한 성장과정임을 알 수 있음
-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현황을 보면 선진국일수록 많은 대기업을 보유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1개로 세계 10위)

포춘지 선정 국가별 세계 500대 기업 수('04년 기준)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중국	캐나다	스위스	네덜란드	한국
189	82	37	35	34	15	13	12	12	11

( 성장동력으로서의 재벌의 한계 )

- 재벌의 자본축적 방식은 주기적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
  - 과다차입에 의존한 과잉중복투자를 계속한 재벌의 자본축적 방식은 대외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취약하여 세계경제의 주요 환경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위기에 직면하였음
- 내부거래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전환
  - 경제개발 초기에 내부거래를 정당화하였던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이 점차 개선되어 내부거래를 통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으며,
  - 특히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 재벌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재벌기업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고 자본시장의 발달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재벌그룹의 공격적 투자수행 능력의 약화
  - 외환위기 이후 부채비율규제 및 내부거래규제 등 규제 강화, 그리고 단기 업적주의 및 고배당 등 경영행태의 변화로 재벌그룹의 공격적 투자 수행능력이 과거보다 약화
- 2,3세 재벌 총수의 취약한 경영능력
  - 우리나라 재벌의 경우 많은 창업주의 2,3세가 '80년대를 전후하여 경영을 세습하였으나, 경영능력의 취약으로 기업의 발전 잠재력을 훼손하고 심지어 파산으로 몰고 간 사례가 다수임

◆ 성장동력으로서의 재벌기능 강화를 위한 과제 ◆

- 투명성 제고와 함께 지속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 국제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의 출현 및 성장을 위한 국가적 지원
-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 목차로 돌아가기](#)

### 3.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성과와 한계

#### (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의 성공 요인 )

##### □ 대기업을 위주로 한 수출주도형 전략

- 우리나라는 '70년대 중화학 공업화 전략과 병행하여 본격적인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소위 '輸出立國')을 추진하였으며,
  -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중화학 공업의 특성 상 자연스럽게 대기업을 위주로 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선택하였음
- \* 대만의 경우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별성을 가짐

##### □ 국산화·계열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산업화 전략

- 정부는 수출지향 산업화와 병행하여 경제개발 초기부터 유치산업보호를 통한 국산화·계열화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 이에 따라 국내 산업 간 연관관계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수출의 증가가 내수확대와 경제성장으로 파급되는 경제시스템이 꾸준히 발전하였음

##### □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우리나라의 수출산업 성공요인 중 하나는 세계시장의 수요구조 변화 등에 맞추어 끊임없는 구조변화를 추진한 것임
- '80년대에는 의복제품, 섬유제품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전기기계장치, 통신기기, 자동차 등 자본·지식집약 산업이 주종을 이룸

(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의 한계 )

□ 소수 주종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구조의 취약성

- '90년대 이후 반도체, 정보통신, 자동차 등 소수 주종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구조가 형성되면서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출산업의 적응력이 약화됨
  - 주종품목의 수출가격이 하락하거나 해외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수출 및 경제성장에 악영향 초래 우려

□ 수출산업의 성장유발효과가 감소

- '90년대 이후 소수 대기업 중심의 가공·조립 위주 IT산업에 의존하게 되면서 국내 산업간 분업연관이 약화됨
  - 제조업 생산자 유발계수는 1990년을 정점으로 점차 약화

제조업 생산유발계수 추이

	1985	1990	1995	2000
산업전체	2.02	2.06	1.95	1.96
(전기·전자)	(1.85)	(1.93)	(1.77)	(1.71)

- 이는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취약성에도 큰 원인

□ 저임금에 기초한 가격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

- 한국 수출산업은 저임금에 기초한 가격 경쟁력에 크게 의존하여 왔으나, 임금상승에 따라 중국 등 후발 개도국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임

◆ 수출주도 경제성장의 지속을 위한 과제 ◆

- 부품소재산업의 기술력, 경쟁력 제고
- 고부가가치 산업위주로 수출산업의 고도화 지속 추진

[☞ 목차로 돌아가기](#)

## 4. 금융산업의 성과와 한계

### (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 )

- 경제개발 과정에서 정부는 금융산업을 그 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독립된 산업이 아니라, 실물경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였음
  - 전략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선별금융, 수출금융 등 각종 신용할당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금리를 통제하는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을 사용하였음
  - 그리고 정부주도 개발정책의 실패로 부실기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제하기 위해 산업합리화 등의 명목으로 인위적인 금융지원을 하는 통로로 금융기관을 이용하였음

### ( 금융의 부실화와 금융산업의 발전 지체 )

- 금융산업은 실물경제 지원을 통해 급속한 경제발전을 달성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나, 금융의 정책수단적인 기능의 지나친 강조와 과도한 금융규제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였음
  - 금융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고생산성 부문으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이는 부실기업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부실기업의 양산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적과 부실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다시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였음
  - 이와 같은 내재적 부실로 인하여 금융산업은 IMF 외환·금융위기 이후 가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제반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경험하였음



( 금융산업의 한계 )

□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 약화

-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자금수요 감소 및 금융기관의 안전자산 선호경향 등으로 기업대출이 감소하고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이 감소하였음

은행의 원화대출 대비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의 비중 추이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6
기업대출	67.1	63.0	55.7	51.5	51.8	50.0	49.3
가계대출	27.6	31.5	41.3	46.1	46.2	48.1	48.7

- 이와 같은 영업행태는 우리경제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여전히 취약한 수준

- 오늘날 금융산업은 첨단IT기술과 결합한 고도의 장치산업 내지는 지식집약 산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부가가치 생산능력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부상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그 동안의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진화된 금융기법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규모의 영세성으로 국제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음

◆ 금융산업의 개혁과제 ◆

-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 회복
-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육성
-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

[☞ 목차로 돌아가기](#)

## 5. 사회안전망의 강화

### ( 개발경제 시대의 사회안전망 )

- '70~'80년대 개발경제 시대에 사회안전망의 구축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지 않음
  - 절대다수 국민의 빈곤 상태에서 충분한 일자리 공급을 통한 소득향상이 일차적 목표였으며,
  - 대가족 제도 하에서 위기발생 시의 최저생활 보장은 대가족 내의 상호부조에 의해 일정 정도 해결 가능하였음

### (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 )

- 경제성장이 본격화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함
  - 핵가족화의 진행으로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에 의한 사회보장이 곤란
  - 경제개발의 성공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노후생활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제고
  -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소득 양극화의 진행은 사회통합에 방해가 되고 장기적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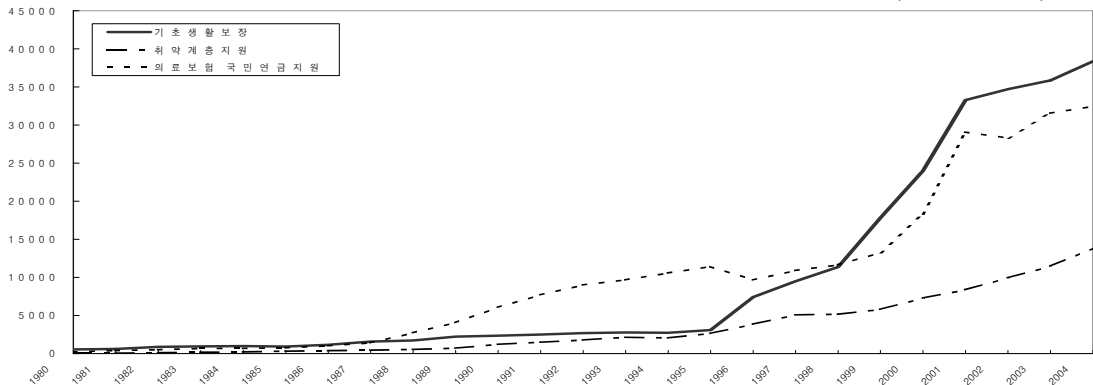
### ( 사회안전망 구축 현황 )

- '80년대 후반의 3저 호황과 '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사회안전망이 점차로 강화되는 추세임
  - '80년대 후반의 국민연금 도입 및 의료보험 확대, '90년대 중반의 고용보험 도입, '97년 경제위기 이후의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이 점차로 강화되는 추세임

- 특히 참여정부 출범이후 기초생활보장,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의료보험·국민연금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주요 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 변동추이

(단위: 억원)



( 현행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문제점 )

-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있어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함
  - 제1차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전 국민의 25%가 납부유예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제2차적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인구 7% 중 실제보호인구는 2.9%에 불과
  -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부담률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필요한 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함
  - 또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개혁과제 추진이 시급

◆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 ◆

- 사회안전망 강화에 소요되는 재정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및 소득과약 인프라 구축
-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의 보장성과 지속성 강화 추진

[☞ 목차로 돌아가기](#)

## 6. 노사관계의 변화

### ( 경제개발을 위한 노동자의 기여 )

- 경제발전 과정에서 노동은 '先성장 後분배'의 논리에 따라 국가에 의한 통제 하에 '산업역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 '87년 이전에 노동운동은 국가에 의하여 억압되었으며,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는 자본의 초기 축적에 크게 기여하였음
  - 국가에 의한 공업고, 직업훈련원, 대학 등의 설립 및 지원이 이루어져 양질의 인력이 대거 시장에 공급되었으며, 이는 산업발전을 달성하는 데 기여함
  -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의 유보, 분배의 소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 내수 기반의 약화 문제가 나타났으며, 이는 '87년 이후 노동운동의 폭발적 고양으로 이어짐

### ( 노동운동과 노사갈등 )

- '87년 이후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경제개발 시대의 문제점들이 일정하게 해소되기도 하였으나, 분배와 고용안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상시화되면서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창출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노동운동이 고양된 '87년 이후 현재까지 노사는 대립적 등거리 관계(*arm's length relation*)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흔히 임금인상을 둘러싼 연례적인 분규와 갈등으로 나타남
  - 특히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고용조정을 거치면서 이후 노동자와 노조는 기업 단위 고용안정에 집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조정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참가 등에 대한 요구를 강화함
  - 그러나 사용자는 경영권 침해 우려 때문에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노사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국가에 의한 권위적 노동통제는 후퇴하였지만, 노동계는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사 갈등은 흔히 노정 갈등으로 비화됨

## ( 현행 노사관계의 문제점 )

- 현 시점에서 노사관계, 보다 넓게는 노사정 관계에서 저신뢰·고비용의 시스템이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산업경쟁력 강화나 산업평화의 유지, 노동자 삶의 질 개선 등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노동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여 작업장 혁신을 이루고 이를 통하여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함으로써 일자리의 안정과 고소득을 획득하는 '최상의 경로(high road)'는 일부 극소수 기업에서만 나타나고 있음
  - 대다수 기업들은 노동축소적인 자동화·기계 중심의 생산시스템을 추구하고 있고, 노동과정의 소외와 장시간 노동에 직면한 노동자들은 경제적 실리의 확보로 이를 보상하려 함. 이는 결국 자원배분을 둘러싼 제로섬 게임을 일상화함
  -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주가와 이익극대화 중심의 경영은 기업의 시야를 단기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건비의 억제 이외에 고용축소를 포함한 구조조정이 상시화되면서 노동자들의 저항 역시 향상화되는 갈등 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 노동조합은 개발독재의 후퇴와 글로벌화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유사한 저항 위주의 운동 행태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노사간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킴. 더욱이 대기업 중심의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은 대·중소기업 간, 정규-비정규직 간 노동시장의 분단과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음

### ◆ 노사관계의 개혁과제 ◆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의 노력
- 비정규 차별시정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 노사제도의 선진화 : 노조전임자제도 폐지, 무노동무임금원칙 준수 등

[☞ 목차로 돌아가기](#)

## 7. 국가의 기능 변화

### ( 개발국가론의 주요 내용 )

-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국가가 수행한 역할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국민동원 및 국민통합 : 경제개발을 위해서 국민적 에너지를 집결하고 사회 내 이해갈등을 조절·통제
  - 경제개발정책의 수립 : 수입대체 또는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전략산업을 선별적으로 육성
  - 국가권력에 의한 자원배분 : 전략산업에 자원을 집중 배분하였으며, 이를 위해 금융산업에 직접적인 지배력을 행사
  - 국가권력에 의한 자본규율 : 성과가 부진한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구조조정 등 규율기능을 수행
  
- 우리 정부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개발국가의 기능을 (일부)성공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평가됨
  - 「조국근대화(‘64~’71)」, 「국민총화(‘72~’79)」, 「선진국가건설(‘81~’87)」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국민동원 및 국민통합 체제를 확립
  - ‘62~’97의 35년간 7차례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개발을 실시
  - 정책금융 등의 형태를 통한 자금지원과 특정산업에 대한 투자 강요(예: 중화학 공업화)를 통해 전략산업을 육성
  - ‘80년대 초반의 산업구조조정 또는 부실기업정리의 사례와 같이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자본에 대한 규율기능을 행사

## ( 개발국가의 후퇴 )

- '90년대의 세계화 및 자유화 확대로 인해 개발국가의 역할은 한계를 드러내게 됨
  - 재벌들은 특혜적 지원에 근거한 국가의 간섭보다는 자율적 경영을 선호하게 되고 금융의 세계화·개방화에 따라 국가를 통하지 않고 국내시장 및 세계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됨
  - 국가와 자본의 상호 이해에 근거한 연합관계가 해체되기 시작하고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을 제외하고는 국가에 의한 자본규율 기능이 정당화되기 어려워짐
  - 개발독재로 인한 소득불평등 및 정치적 억압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개혁 및 참여에 대한 요구는 개발국가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 대한 전반적 저항으로 분출됨
  - 외환위기 이후 영미식 시장경제가 도입됨에 따라 경제전반에 대한 국가의 조정기능이 약화되고 국가의 자원배분 및 자본규율 기능을 시장이 대체하고 있음

### ◆ 국가기능의 개혁과제 ◆

-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발전비전과 전략의 수립
-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적기 시장개입 또는 조정
-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동체 의사 형성과 이해관계 조정

[☞ 목차로 돌아가기](#)

## IV. 한국경제에 대한 세가지 관점과 모색

### 1. 시장경제론

#### 시장경제의 중요성

- 시장경제론은 민간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는 것, 즉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시장기구에 맡기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음
  
- 이들에 따르면 시장경제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함
  - 시장경제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줌 : 시장경제와 물질적 풍요 간의 관계는 통계수치로도 증명됨
    - 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에 따르면 경제자유지수가 높을수록, 즉 시장경제 원리를 잘 구현하는 나라일수록 1인당 소득이 높게 나타남
  
  - 시장경제일수록 부패가 적음 : 경제자유가 많이 허용되는 국가일수록 부패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날 우리의 부정부패는 시장경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경제가 아닌 부분 때문이었음
  
  - 진보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장경제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적극적 재분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나,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경제체제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증거는 없음
    - 시장경제를 택한 국가일수록 가장 소득이 낮은 10퍼센트 국민의 소득이 높아짐. 즉, 잘사는 나라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수준도 높아짐



## 성장과 분배의 기본원칙

- 경제적 자유의 확대에 따른 경쟁촉진과 그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성장과 소득을 증대시키며,
  - 분배는 성장의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에 의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 복지는 극빈층에 한정되는 자선활동으로서 무임승차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정부가 성장을 도외시하고 분배를 지나치게 강조하였기 때문에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위기국면이 발생하였으며, 과도한 재벌 규제가 성장과 투자의 걸림돌이 되었음
- 또한 과도한 국가개입에 의해 시장경제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으며, 과도한 세금부담, 노동조합의 정치지향성, 비대한 공공부문, 늘어나는 규제 등이 우리경제가 당면한 걸림돌임

## 위기극복을 위한 개혁방안

-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강화하는 '좌파적 개혁'에 의해서만 한국경제는 성장과 번영을 지속할 수 있음
  - 평등이란 목적지를 향해 좌파적 개혁을 시도한 국가 중 빈곤의 늪에서 탈출한 국가가 없으며, 좌파적 개혁이란 20세기를 거치면서 용도 폐기된 단어임

< 참고 >

### 역사적 사례

- 필리핀 :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잘 살던 나라가 보호주의 정책과 민주주의 정책으로 '세계의 가정부'로 전락
- 독일 : '라인강의 기적'이 좌파적 개혁과 경쟁 없는 교육 때문에 '유럽의 병자'로 급전직하
- 아일랜드 : '유럽의 지진아'에서 개방정책과 사회협약을 통해 '켈트의 호랑이'로 변모

□ 시장경제론이 제시한 제도개혁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 투자 장애요인의 적극적 제거
- ② 편하게 돈 쓸 수 있도록 제도정비 : 의료·교육 등에서 평등 의식과 도덕적 당위론을 배격하고 고급 서비스 제공 필요
- ③ 택지, 임금 등 생산요소 가격은 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
- ④ 복지 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함
- ⑤ 경쟁압력을 국내에 불러들일 수 있는 개방의 가속화 필요
- ⑥ 노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 ⑦ 개인의 책임과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연금개혁
- ⑧ 실질적인 언론자유를 보장
- ⑨ 대선과 총선의 선거일을 통합하고 대통령 중임제 실시
- ⑩ 헌법의 경제관련 조항을 개정 : 사유재산제도와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정립하고, 국가 개입은 최대한 억제

### 대표적 주장

□ 보수성향의 경제학자(공병호, 김정호, 좌승희 등)

\* 한국경제의 새로운 모색을 추구하는 여러 입장의 대표 논문과 저작은 <첨부> 참조

[☞ 목차로 돌아가기](#)

## 2. 시장개혁론

### 시장개혁의 의미

- 자원배분 및 자본규율을 시장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곤란하며,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법·제도의 구축 등 '시장의 환경조성이 필요함'
  - 시장의 규율기능에 대한 강한 신뢰를 표방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책임경영과 금융의 적극적인 감시 기능을 강조함
  - 국가는 시장으로부터 무작정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경쟁을 확립하고 혁신과 복지 분야의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데에 개입함
- 시장개혁론은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도, 재벌개혁방안 등에 대한 태도에 따라 '개혁적 시장경제론', '재벌개혁론', '외국자본 비판론' 등으로 구별할 수 있음

### 성장과 분배의 기본원칙

- 논자에 따라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장을 중시하되 분배와의 균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정정도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함
  - 과도한 복지지출에 따른 경제효율성의 저하를 우려하여 조심스러운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주장함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개혁적 시장경제론'과 '재벌개혁론'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경제상황을 경기순환적인 침체국면으로 인식함
  - 다만, 이들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경영방식의 확산이 국내투자의 위축을 야기한 측면이 있음을 수긍
- 그러나 '외국자본 비판론'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에 따른 자본시장의 전면개방과 무리한 재벌개혁이 저투자-저성장, 양극화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였음

## 위기극복을 위한 개혁방안

-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들이 있음
  - '개혁적 시장경제론': 전략적 관점에서 공정경쟁 기반조성과 재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벌의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 '재벌개혁론': 기업가의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사전 감시와 사후 평가시스템의 견고한 구축을 통해 재벌문제, 즉 경제력 집중, 문어발식 확장, 총수의 황제경영 등을 해결 가능
  - '외국자본 비판론': 장기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산업과 금융자본 간의 관계복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동의 하에 '재벌과의 대타협'이 필요함

□ 국가의 역할에 관하여는

- ‘개혁적 시장경제론’과 ‘재벌개혁론’ 공히 국가는 평가와 보상체계가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 ‘외국자본 비판론’은 투자조정을 위해 적극적인 국가개입이 필요하다고 봄

□ 지속적 성장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정규직의 고용보호 축소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즉 고용의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모색되어야 함

□ 금융은 자금제공자로서의 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 정보생산자와 산업자본의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간의 분리가 필요함

□ 고령화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고령인력의 활용, 양질 노동의 공급 제고,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직업 훈련과 재교육 강화 등을 주장함

**대표적 주장**

□ 신고전파 개혁론(폴 크루그먼, 조셉 스티글리츠 등), 신제도학과 등과 시장개혁적인 경제학자(조윤제, 김상조, 이찬근, 장하준 등)

[☞ 목차로 돌아가기](#)

### 3. 사회적 시장경제론

#### 사회적 시장경제의 의의

-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는 스웨덴, 독일 등 유럽의 복지자본주의를 참고하여 발전시킨 개념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함축함
  - 경제운영의 지도적 원리로서 자유의 원리를 존중하되, 이에 못지않게 사회적 연대의 원리를 중시함
    - 기업경영에 주주 이외에 노동자,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중시하며,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라고도 함
  - 경제조정양식의 측면에서 시장 이외의 조정기제(특히 국가)를 광범위하고 적절하게 활용함
  - 외국자본 또는 세계경제와 대립하는 개념으로서의 국민경제 또는 민족경제의 통합성 확보를 중시함
-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은 이상과 같은 원리에 한국적 특수성, 즉 고도성장의 필요성, 세계화·개방화 압력,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함

#### 성장과 분배의 기본원칙

- 사회적 시장경제론은 국민대중의 사회경제적 시민권의 신장 또는 민주복지사회의 건설을 이념으로 하고 있음
  - '2만 달러'의 달성을 주장하는 성장우선론자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동반성장 또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성장을 강조함
  - '2만 달러'라는 GDP의 총량크기보다는 고용안정과 생활임금, 사회복지, 자유시간, 환경 등 삶의 질이 중요함을 역설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현재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계층간 분배 양극화, 고용없는 성장과 비정규직 양산 등에 의한 '노동의 위기'라고 인식함
  - 저소득 계층의 삶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 개발연대 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임
- 또한 현재의 경제위기는 국민경제 재생산 시스템의 위기임
  - 설비투자의 부진, 대기업-중소기업 간 투자의 양극화, IT산업 위주의 수출주도 성장, 산업금융시스템의 파괴 등에 의해 국민경제 재생산 시스템의 위기가 발생하였음
- 현행 위기는 외환위기 이후 영미식 자본주의 모델을 무분별하고 급격하게 도입한 데에 그 근본원인이 있음
  - 주주이익 극대화를 기치로 한 국제금융자본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양극화의 단초가 형성됨
    -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비정규직의 양산에 의한 양극화를 초래
    - 금융산업의 구조개편은 금융의 산업공헌 시스템의 균열을 초래
    - 주주가치 중시는 단기업적의 강조와 장기투자의 경시를 초래

## 위기극복을 위한 개혁방안

- 양극화 극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노동과 복지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함
  -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비정규노동의 남용을 규제하고 차별을 금지하여야 함
- 핵심 개혁과제인 재벌개혁에 대하여는 다양한 주장이 있음

- 재벌은 주주이익 극대화 지향에서 벗어나 노동자, 중소기업 등 이  
해당사자와 협력-공생하는 시민기업으로 거듭나야 함
- 재벌기업의 오너쉽 보호와 노동자의 사회적 시민권 간의 교  
환을 포함한 대타협을 통한 사회통합이 필요함
- 사회적 시장경제론은 새로운 성장모델의 핵심요소로서 금융시스  
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투기적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민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  
어선을 구축하는 방안(국적 금융자본 육성 등)과,
  - 금융의 투기적 유동성을 통제함으로써 금융의 산업공헌 시스템을  
확립하고 국내 저축과 투자의 연계를 회복하는 방안 등이 필요함
-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신산업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함

### 대표적 주장

- 진보적 성향의 제도경제학자
  - 이병천(강원대), 최장집(고려대) 교수 등



## 요약 : 한국경제에 대한 시각 비교

	시장경제론	시장 개혁론			사회적 시장경제론
		개혁적 시장경제론	재벌개혁론	외국자본 비판론	
성장과 분배의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장이 잘되면 분배는 저절로 해결 (Trickle Down Effec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장 내에서의 분배 동시 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장과 분배 간의 균형</li> </ul>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위기국면</li> <li>과다한 재벌규제 성장 걸림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기상황 아님</li> <li>재벌개혁 미흡한 측면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각한 위기상황</li> <li>과도한 영미식 구조개혁으로 양극화</li> </ul>		
개혁 방안	재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절충적 방안 (예 자주화요건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극적 재벌개혁 (공정거래질서 확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합의하의 재벌과의 대타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기업화</li> </ul>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벌의 금융(은행)지배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과 산업자본 간의 분리</li> <li>산업의 감시자로서의 금융의 역할 강조</li> </ul>		
노사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조 정상화(정치지향성 배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유연성 제고(사회적 대타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안정성 제고</li> </ul>
	국가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개입 최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환경 조성자 및 시장실패 보완자로서의 국가개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해관계 조정자로서의 국가의 적극적 개입</li> </ul>	
주요 관련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이에크, 시카고학파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전파 개혁론(폴 크루그먼, 조셉 스티글리츠 등), 신제도주의 경제학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아시아 발전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도주의 경제학 등</li> </ul>
	대표적 이론가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수성향의 경제학자(공병호, 김정호, 좌승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 개혁적 인 경제학자(조윤제, 임원혁 등)</li> <li>참여연대(김상조) 등의 시민단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안연대(이찬근) 등 일부 시민단체, 장하준(英) 교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장집, 이병천 등</li> </ul>

<첨부>

관점별 주요 논문 및 저서 목록

구분		대표저자 및 논문 또는 저서
시장경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병호, 2005, 『한국 변영의 길』, 해냄</li> <li>○ 박효중 외, 2005, 『한국의 보수를論한다』, 바오</li> </ul>
시장개혁론	개혁적 시장경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운제, 2005, 「한국경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05년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1주제 발표논문</li> <li>○ 임원혁, 2005, “한국경제와 재벌개혁”, 《시민과 세계 제7호》, 참여사회연구소</li> </ul>
	재벌 개혁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상조, 2004, “재벌개혁: 이해관계 충돌 및 조정의 현실적 고려사항”, 《시민과 세계 제5호》, 참여사회연구소</li> </ul>
	외국자본 비판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찬근, 2004, “한국 경제시스템의 위기와 대안정책”, 《시민과 세계 제6호》, 참여사회연구소</li> <li>○ 장하준, 2004, “경제‘개혁’의 방향을 다시 생각한다”, 《시민과 세계 제5호》, 참여사회연구소</li> <li>○ 이찬근 외, 2004, 『한국경제가 사라진다』, 21세기 북스</li> <li>○ 신장섭·장하준, 2004,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창비</li> </ul>
사회적 시장경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엮음, 2004, 『경제개혁의 길: 경제 개혁정책의 국제비교』, 한울아카데미</li> <li>○ 이병천 엮음, 2003,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창비</li> <li>○ 김진업 편, 2001, 『한국자본주의 발전모델의 형성과 해체』, 나눔의 집</li> <li>○ 유철규 편, 2004, 『박정희 모델과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함께 읽는 책</li> <li>○ 최장집 외, 2005, 『위기의 노동』, 후마니타스</li> <li>○ 이병천, “양극화의 함정과 민주화의 깨어진 약속: 동반 성장의 시민경제 대안을 찾아서”, 《시민과 세계 제7호》, 참여사회연구소</li> </ul>

※ 굵게 표시된 도서목록은 참고할만한 대표적 저작

[☞ 목차로 돌아가기](#)